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보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ewsletter



## ●●● 인사말(Greetings)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 창간사 *Foreword*

인권은 모든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종결점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면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불가피하고, 결국 북한주민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로의 전환도 이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을 개선하는 일은 북한의 변화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길이며, 그것이 곧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인권은 인류보편적 절대가치입니다. 이를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보혁논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통일의 궁극적 가치도 인권회복에 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이 궁핍에서 벗어나고, 억울하게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며, 원하는 정부를 선택하고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물론, 민족의 통일 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회보」를 창간합니다.

Human rights are both the start and end to solving every North Korean problem. Once human rights have improved, North Korean reform, opening, and democratization become inevitable, and eventually the North Korean people's quality of life will greatly improve. Such developments will make the state realize that it no longer requires nuclear weapons. Thus, improving human rights leads to change in North Korea and consolidates mutually respected inter-Korean relations, which will pave the road to peaceful unification.

Human rights are universal values. Pursuing them can be neither a political issue, nor a dispute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s. The ultimate value of Korean un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North Korea can only overcome poverty, release the unjustly imprisoned, allow inter-Korean meetings, love and marriage and grant people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government and express their own opinions through inter-Korean re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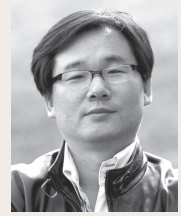
In this contex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stitutes and operates a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rai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nd cooperate and implement practical human rights measures for North Korean residents. The Committee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the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ewsletter hoping it will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well as expressing everyone's longing for national unification.

Tae-Woo Kim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논단 (Forum)**

##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 촉구하는 중국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듣고 싶다

*Wishing to Hear Outcries from the Chinese People  
Over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Chinese Government*



김규호 |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Kyu-Ho Kim | Secretary General, Christian NGO

북한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100일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탈북하는 사람에 대해 '3대를 멸족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월 13일 탈북자 2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강제복송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현재 8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이 강제복송 되면 북한당국에 의해 민족의 반역자 또는 스파이로 낙인이 찍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구타, 고문, 구금, 강제노역, 정치범수용소 수용을 당하고, 심지어는 공개처형까지 당한다. 이러한 사실을 중국정부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단순 불법이주자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체포, 매일 500명 이상을 복송시키고 있다.(중국 사회과학원 2004년 통계) 또한 탈북난민들을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단체들이 편지와 탄원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탈북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 중국은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며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눈을 감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동안 필자가 속한 <기독교사회책임>은 2004년 설립초기부터 <탈북난민강제복송저지국

제캠페인>결성에 적극 참여하여 강제복송중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북경올림픽이 개최되었던 2008년 탈북자 회원들과 함께 탈북자인권을 외면하는 '인권없는 올림픽 반대'를 외치며 북경올림픽 성화봉송저지운동을 펼쳤고 올림픽 후 9월부터는 4년여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효자동 중국대사관 건너 옥인교회 앞에서 "탈북난민강제복송중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며 금주에 184차 집회(12.5.9일 현재)를 가졌다. 또한 매년 6월 유럽을 순회하며 각국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촉구하는 '북한인권유럽캠페인'을 3차례 가진 바 있으며 올해는 탈북동포회실버합창단 20여명과 함께 6월 11-23일까지 12박 13일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순회하여 4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된 중국대사관앞 집회를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매일 오후 2시와 7시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 500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이 운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강제복송 문제 제기는 다른 때와 다르게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특별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단식과 차인표씨를 비롯한 30여명의 연예인들, 세계적

인 가수 보니엠이 동참하면서 이슈가 커졌고 우리정부도 그 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문제제기 함으로 중국정부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중국정부도 3년 이상 주중 영사관 내 체류 중이던 국군포로가족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강제복송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도 중국정부에 강제복송 문제해결을 강력 촉구했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중요 아젠다가 되어 국제적으로도 이슈화가 되었다.

이는 그동안 수년간 탈북난민강제복송 중지를 위해 힘써온 북한인권단체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번이야 말로 중국정부의 강제복송을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매일 오후 2시와 7시에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과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과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른 중고생, 초와 종이컵을 사가지 온 중년신사, 떡을 해오신 떡집사장님, 컵라면과 쌀을 보내주시고 호텔사장님, 물과 음료수를 가져 오신 분들, 근처 식당에 돈을 맡기면서 식사하도록 도와주신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 해주었다. 특히 부산과 울산에서는 <탈북난민구출생명버스>가 조직되어 200여명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으며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대학가에서 북한인권사진전이 개최되며 강제복송 중지 서명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인 관심을 통해 이제 강제복송중지운동이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도약하기 위해 6월 26-27일 양일간 <탈북난민구출국제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기독교계에서는 범교단적인 조직인 <탈북난민강제복송반대한국교회연합>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인권영역에 있어서 탈북난민 이슈가 지금과 같이 뜨거운 관심을 받아 본적이 없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운동을 이끌고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 강제복송이 중지된다면 결국 이 사건이 통일을 여는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독에서 탈출한 동독시민들이 이웃국가들이 강제송환하지 않음으로 대량탈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결국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강제복송중지 운동은 통일을 여는 가장 실효적인 운동이 아닐 수 없다.

강제복송중지를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변화가 최우선이다. 중국정부는 대국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른 나라의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략은 중국정부를 공격하기 보다는 중국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중국네티즌의 80% 이상이 강제복송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의 양심있는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중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강제복송 중지를 뜨겁게 요청한다면 자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정부로서는 강제복송을 중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탈북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북한인권단체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룹이 중국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한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과 유학생,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한 캠페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중국인 유학생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등 3가지 영역에서의 캠페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유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 향후 중국사회의 리더가 될 그룹이고 선진국에 관광을 올 정도의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 중산층 이상의 지도층그룹이기 때문이

다. 만일 중국 지도층들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국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인터넷 상에서 중국어 캠페인과 중국사이트를 통한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지식층들이 적극 동참한다면 큰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엘리트들과 지도층들의 인식전환과 그를 통한 중국정부의 정책전환을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조직 특히 한인교회들, 선교사들을 통해 각 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자국 내에 상주하거나 관광을 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적극 펼쳐야 한다. 또한 전 세계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

다발로 일어난다면 중국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더욱 힘을 합쳐야 하며 상호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일개 단체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탈북난민 문제해결의 성패가 달려있다. 또한 강제북송이 중지되는 일이 곧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통일이야 말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중지시키며 탈북난민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며 통일한국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중국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듣고 싶다.



North Korea's new leader Kim Jong-un declared a 100-day mourning period beginning on the day of Kim Jong-il's death, and proclaimed the annihilation of three generations of relatives of all those caught trying to cross the borders without permission during this period. Meanwhile, since the news release stating that 24 defectors arrested by Chinese security officers will be repatriated to North Korea, rallies have been held for more than 80 days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in South Korea to express opposition to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defectors to North Korea.

Inducing change in the Chinese government is of primary importance to prevent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has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The Chinese government, proud to be one of the world's superpowers, will not respond to the demands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is sensitive to the voices of their own people. Thus, South Korean strategy should focus on persuading the Chinese public rather than criticizing their government. According to one press report, more than 80% of Chinese netizens oppose forcible repatriation. If we wholeheartedly appeal to conscientious Chinese citizens to stop forcible repatriation, the Chinese government will not be able to deny the demands of their own people and will have no choice but to stop forcible repatriation.

Thus, we suggest that every group, including organization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nterested in defectors, seek measures to persuade the Chinese people. In particular, we must focus on four awareness campaigns: one for Chinese, Korean-Chinese, and Chinese students residing in South Korea; one for Chinese tourists to South Korea; one for the Chinese network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one for Chinese students and tourists in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is essential to consolidate a worldwide network to induce Chinese elites and leaders to change their perceptions of Chinese policy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or this purpose, domestic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hould join forces and band together to solve these issues, which cannot be handled by any individual organiza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defectors' repatriation largely depends on our actions to deal with the issue. We would like to hear outcries from the Chinese people opposing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기대하며



*Expecting more Aggressive Attention and Interv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김영일 |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  
Young-Il Kim | Executive Director,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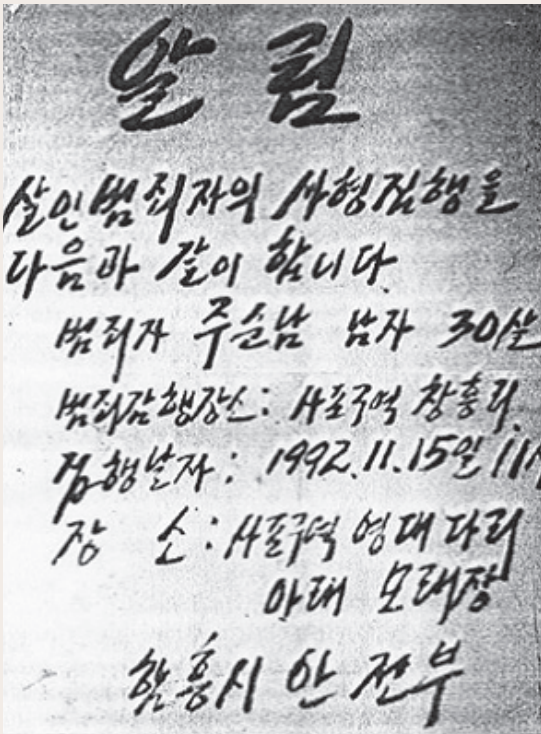
지금 이미지는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할 때 마을이나 학교 등에 붙이는 '포고문'이다. 과거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이 포고문을 직접 보았고 공개처형 현장도 지켜 봤다. 나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공개처형이었는데 한국에 오니 누군가가 포고문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 왔다. 사실 이렇게 증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1990년대는 함경남도 함흥이라는 지역에서 공개처형이 가장 많이 진행됐다. 공개처형은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터나 다리 밑에서 진행하곤 하였다. 당시 목격했던 공개처

형방식은 총살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수형이었다. 사형수들의 입에는 자갈이 물려져 있었고 북한의 경찰(예전에는 '안전원'이라고 불리었으나 지금은 '보안원'이라고 함)들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명을 공개하였다. '술을 먹고 부모를 구타한 것', '경찰주택에서 도둑질 한 것', '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훔친 것', '전기선을 절단 한 것' 등이다. 여기 사진에 있는 주순남도 당시 술을 먹고 주변사람들을 구타해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총살형 당했다. 총살형들은 현장에서 죄인의 눈, 입, 팔다리 모두를 결박하고 변호사의 변론도 없이 사형은 언도되곤 하였다.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당연히 변호사 따위는 필요도 없이 당국에서 죽을 죄라고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줄만 알았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 따위에는 큰 흔들림 없이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토론주제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더 큰 관심과 개입을 바란다는 의미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그 자체로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같은 수위의 관심과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좀 더 강력하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2005년부터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해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결의안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안보리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연



히 북한당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유엔이 지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안보리 결의안도 북한당국이 번번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월 13일 소위 ‘은하3호’로 명명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도 2006년 UN 안보리에서 결의한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미사일 실험에 따른 제재 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의장성명이 발표되고 북한당국은 의장성명을 강력히 배격하며 제3차 핵실험 실시 의지를 재천명했다. 결국 국제사회는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동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며 스스로 고립되어 오던 북한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약제조, 위조지폐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지만 국제 규범을 어긴 대가로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제재를 받을 만큼 받은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그 제재가 북한당국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제사회의 이런 방식의 북한 컨트롤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당국에게 전혀 아무렇지 않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북한당국자들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국제사회 또한 북한이 열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국제적 규범인 자유와 인권을 주민들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북한 당국자들만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현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없게 한다.

그 제약요소는 다음 몇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김일성 사후 북한주민들의 맹목적 충성심은 거의 사라졌다.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여 개인들의 사유재산이 증가하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절대권력에 저항할 것이다. 둘째, 3대 세습

을 하면서 행한 정치적 탄압들은 시한폭탄처럼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개혁개방으로 외부 정보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불만은 다양한 저항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김씨 일가는 북한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이러한 절대적 독점권을 양도하게 하는데 이 또한 독재자의 용기와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외적으로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등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앞서 말한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의 대외적인 정책들에 그대로 반영된다. 체제가 계속 유지되려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만한 대외적인 충격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일정수준의 압박은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활용할 가치도 있다고 본다. 주민들에게 있어 북한이 가난한 이유는 대국들의 간섭 때문이고 그래서 더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선동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외부소식을 철저히 차단하였기에 이러한 정치선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저지른 도발은 북한내부에서 외부의 공격에 대응한 북한의 자의적 조치로 선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문제를 새롭게 풀어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제재는 그 동안 북한이 너무도 많이 받아왔기에 큰 효과가 없다. 이러한 제재는 내부 불만을 잠재울 정치적 선동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국들은 당장 자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군사문제에만 너무 치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있다. 북한내부에서 독재세력을 견제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북한당국은 무모한 도발을 하게 되고 이 도발은 다시 내부 결속에 이용된다.

여기서 UN안보리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한번 짚어보자. 그 동안 계속 반복 되어온 문제이지만 역시 안보리는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고 해도 상임이사국 1개 국이라도 거부를 하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기간 안보리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어 오던 문제이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다. 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다룬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서두와 본문에서 국제사회의 북한문제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지역 출신으로 하루 빨리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니 너그럽게 받아주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전래에 없는 탄압과 통제를 해오고 있

다. 북한 내부에 자생적인 민주주의 싹이 만들어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북한내부에서 이러한 싹들이 생겨날 수 있게 북한의 생리를 좀 더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북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북한 사회가 자유로워지면 북한에서도 자생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군사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북한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UN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는 일정부분만 효과를 보고 있다. 북한당국에 자극이 되어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당국이 필요로 한 정치적 선동의 소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국제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인권탄압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 북한문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한 북한인권 개선 동참을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



The picture on the left is a proclamation of the sort that would be posted on the wall of a building in a village or a school wh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old public executions. While living in North Korea, I thought that if the authorities sentenced someone to death, it would occur, regardless of any assistance from attorneys. These things happen repeatedly,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o not hesitate to slaughter their own people in spite of the worr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it is high time to think about North Korean issues from a new perspective. Th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to date have not had any visible effects. These sanctions can be used for political propaganda to quell internal complaints. Strong countries must change their self-interested military-focused policies right away. North Korea's most important problems are internally derived. There is no any alternative power to check the dictatorship inside North Korea, and reckless provocations are used to strengthen unity.

Interest and intervention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ssential, because currently the only hop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s to seek help from the outsid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unprecedentedly tightened suppression of and control over their residents. There is almost no chance of an autonomous development of democracy inside North Korea. Th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understand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nd implementing a sound North Korean polic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democracy inside North Korea. NGOs dealing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hould continue to appeal and persuad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와 기독교의 태도

###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Christian Beliefs*



김운태 | 백석대학교 교수/사단법인 두리하나 이사  
Youn-Tae Kim | Director, Durihana

탈북자들의 강제복송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여러 관련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일해 오고 또 여론의 환기를 시키려 노력도 해 왔지만 대개 사회적 이슈화로까지 되진 않았는데, 요즘은 이전과는 사뭇 달리 탈북자들의 강제복송과 관련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언론에서도 꽤 오랫동안 제법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어느 정도 중심 주제가 되어지기도 한다. 이와같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는 박선영 의원을 위시한 몇몇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사실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특별히 탈북자들의 강제복송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관심과 참여는 이처럼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탈북자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음에도 전반적으로 기독교회가 탈북자 강제복송반대 서명운동에 그다지 적극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중 하나로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목사님)들의 종교에 대한 다소 편협한 생각도 지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곧 종교는 영적인 문제 또는 자기 종교의 믿음의 본질에 관련된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세속적인 문제 또는 자기 종교의 믿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것들에 지나

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편협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종교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면서 신령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면 되었지, 길거리 나가서 반대서명운동하고 탈북자 강제복송반대집회 참석하고 하는 일들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르치신 가르침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본문은 눅 10:25-37절에 기록되고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영적인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런 예수님에게 한 율법교사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당신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얻겠는가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냐고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했고, 예수께서는 그의 그런 대답을 인



정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어찌 들으면 이 율법교사가 늘 행하던 그런 종교적인 일을 계속 행하라는 말로 이해되었음직 하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한 비유로 대답하여 주셨는데,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이야기가 그것이다.

예루살렘과 예리고 사이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 자기 가던 길을 가 버렸다. 그들은 둘 다 종교인으로 필경 예루살렘에서 가장 종교적인, 영적인 집무를 수행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예리고로 가던 길이었을 것이다. 어찌면 그들에게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영적인 직무를 행해야 할 일로 바빴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이 지나간 후 곧 이어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들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장 비종교적인 사람이요 세속적인 사람, 아니 그런 정도를 넘어 자신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죄인 따위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제 길로 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당시 여행자에게 필수품인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제공하며 상처를 돌보아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 그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면서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푸자니이다”고 대답했고, 예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는 것과 이웃에

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의 영적인 것으로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진정으로 거듭난 영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다.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탈북자들이 처한 형편과 그들의 필요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결코 외면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우리가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그들이 강제 복송되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 않는다. 그들이 당하게 될 고문과 강제 수용소에서의 비참한 생활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한 형편임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더욱더 모진 고문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거창한 교회의 외형과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고 또 그런 대교회로의 부흥에만 열중한 채 이들을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내어 버려둔다면 이러한 한국교회와 저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지낸 후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기독교의 제일의 사명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구령사업은 단순히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구령사업은 당장 자비가 필요한 이웃을 보았을 때 우선 그들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종교로서 기독교의 진정한 생명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독교적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Even though the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especially their repatriation, have become significant social issues, it seems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including Christian groups, have not shown any particular attention to these problems or worked to solve them. This may be because Christian leaders have relatively narrow-minded views on religion. Christians believing in Jesus Christ should follow and practice what he taught us in the Bible.

One of the most compelling stories in the Bible associated with Christian duty is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n the Gospel of Luke, Chapter 10:25-37. A man was travelling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was attacked by robbers and left half dead. A priest and a Levite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and when they saw the man, they pass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 travelling Samaritan went to the man.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the Samaritan might be considered the most non-religious and secular person. However, when he saw the victimized man, he did not pass by — he stopped to help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saying that he would reimburse the innkeeper for any extra expenses s/he may incur. In this parable, Jesus does not distinguish having eternal life from showing mercy to one's neighbor by dictating the former as a spiritual matter and the latter as a secular one. Rather, bestowing charity on one's neighbors in need is as spiritual as gathering together in a church for services, studying the Bible and praising the Lord.

Today North Korean defectors are "our neighbors," and it is our duty to visit and bestow charity upon them. We have heard of the torture and misery they endure in concentration camps, a fate worse than death itself. If South Korean churches, magnificently ornamented and boasting millions of followers, are engrossed in their own prosperity and ignore the miserabl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n churches and the priest and the Levite who neglected the man on their way from the holy service in Jerusalem? Saving one's own life and that of one's neighbor is the number one Christian priority. The true duty of salvation starts with showing mercy to a neighbor in urgent need of help. This is the foundation of Christianity, and the reason why churches take interest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ovemen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운동과 북한인권

### *The Rally for Stopping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서재평 |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감사  
Jae-Pyoung Seo | Secretary General, Committee for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최근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강력해진 국경단속과 복송 탈북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남한입국을 목적으로 움직이던 탈북자 수십 명이 심양을 비롯한 여러 곳에

서 동시에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 거기에는 갓난아기와 10대 소녀,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되었다. 특히 북한을 갓 탈출한 10대의 딸을 가진 어머니(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는 복송될 바엔 차라리 독약을 전달해줄 것을 호소해 우리 모두의 아픔을 자아냈다.

지난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에 새로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탈북자에 대하여 3대를 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경경비를 여는 때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고통과 시달림에 희망이 없는 북한주민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과 매일 오후 2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저녁7시에는 촛불을 켜고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으며 결과 중국정부의 반응도 나타났다. 특히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후진타오국가주석에게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구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베이징주재 한국대사관에 3년동안 묶여 있던 국군포로 가족일행의 한국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후 중국공안이 탈북자단속을 하지 않고 강제복송을 미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으나 당시 체포된 30여명은 전부 복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국회의원의 단식농성으로 시작된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운동은 여러 가지 견해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실지 중국에서 탈북자구출운동을 하고 있는 구출단체들은 중국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면 구출운동이 더욱 힘들어지고 구출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손해는 탈북자가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고 있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구출운동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이상으로 줄어 들었다. 중국의 강력해진 단

속 때문에 3국으로의 탈출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장길수 가족이 중국의 고등난민 판문관실을 통해 필리핀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시기 중국의 연변지역에서는 중국공안의 대대적인 검거선봉이 시작되어 하루 연길 시내에만 300명의 탈북자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복송되었다. 검거선봉에 공안인력이 모자라 일반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체포작전을 펼친 3개월간 연변지역의 탈북자 수천 명이 잡혀 나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운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먼 로정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이 중단 되면 결국 북한체제는 붕괴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지레대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현 북한정권하에서는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과 북한인권 개선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고리라고 볼 수 있다.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은 결국 북한인권문제의 희망적 대문이 열리는 광경이고,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탈북자 강제복송 종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하는 북한인권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북한인권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여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열매가 하루 빨리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Kim Jong-un, the new leader of North Korean government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last year, ordered the annihilation of three generations of a defector's relatives and intensified border security with stricter punishments than ever before. However, many North Korean residents, having long suffered without any hope, still continue crossing the border at the risk of their own lives.

Last February dozens of North Korean defectors seeking entry to South Korea were caught by Chinese security officers throughout Northeast China, including Shenyang. They represented a variety of age groups, from a new born baby and a teenaged girl, to some elderly people in their seventies. One woman, the mother of a teenaged girl who had recently

defected from North Korea and resettled in Seoul, begged to take poison rather than be repatriated to North Korea. It was truly a heartbreaking story.

This incident incited some people to launch a hunger strike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and hold daily press conferences at 2 p.m. People have also held candlelight rallies every evening at 7 p.m. strongly urg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stop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 Despite these efforts, rescue efforts for defectors in China have decreased by more than a half in the last year. China's stern crackdown on North Korean defectors has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escape to third countries.

The currently ongoing rallies aimed at stopping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eem to be part of an endless journey. If the Chinese government stopped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upon which North Korean regime's fate depends, the regime would collapse. China understands this well and has worked to preven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The prospects for human rights solutions in North Korea under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are slim. China is a key actor involved in both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end of the repatriations will eventually open a door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opefully, human rights organization involved in North Korean issues and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will cooperate to suggest various ways to expand the current rallies against forcible repatriation to include all South Koreans and bring about considerable results.

##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 줄 수 있는 ‘제 2광복의 선물’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ould be a  
“Second Gift Restoring Independence”*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Chan-Il An | Director, Center for World North Korean Studies

올해로 우리민족은 광복 예순일곱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짓밟힌 강산에도 광복은 오는가’라는 반문이 있듯 북한에도 똑 같은 광복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에는 광복은 없고 ‘해방기념일’만 존재한다. 위대한 수령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강도 일제를 무찌르고 나라를 찾아주었다는 해방의 논리는 북한 신세대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아직 채 끝나지 않은 미완의 혁명의 논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주림을 이겨야 하는 대의명분으로 군림한다.

이런 혁명사관 계급사관이 지배하는 북한 체제에 인권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래서 세계는 북한을 가리켜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또 오늘 북한 인민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가 일제말기보다도 못하다고 탄식하고 있다. 일제 말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죽고 맞아죽지는 않았다. 또 그토록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일도 많지 않았다. 일제 말기 서대문형무소와 함흥형무소 등에 갇혀있던 애국자들에 비해 오늘 북한의 12개 이상 수용소에 갇혀 있는 무고한 정치범들의 수는 열 배, 백배

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고 민주국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

하여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대안이 제시되게 된 것이다. 6년여 동안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야당의 주장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입으로만 북한 인권이고 행동은 피동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자극받는 자의 소수와 인권탄압으로 고통 받는 다수 중 어느 쪽이 북한의 주체인지를...

단지 평양의 집권자 몇 사람의 불쾌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헌법에서 영토조항, 즉 북한도 우리의 부속도서이며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어쨌서 우리 야당과 진보세력은 그토록 북한 집권자들에 대해 관대하면서 다수의 억눌린 인민들에 대해서는 냉정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정권은 사악함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없다. 그들에게 자비의 정신으로 약간의 쌀이나 집어주는 ‘북한인권복지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인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길이 아니라 독재체제에게 지배의 시간을 벌게 해주는 일이란 걸 왜 야당이 모른단 말인가.

정녕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어떤가. 북한의 5도를 대표하는 대표들을 우리 국회로 보내보자. 대의민주주의 핵심은 지역대표제인데 남한 지역의 대표는 꼭 차 있지만 북한 지역의 대표는 전무하니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위해 사력을 바치겠는가. 탈북자도 좋고 이북 5도 출신도 좋다. 북한 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5도 대표만이라도 선출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헌법정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600명이 훨씬 넘는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된다. 왜 북한이 그토록 많은 대의원을 두는가. 바로 자신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인권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할 숙명의 과정이며 북한인권법은 그 도강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선물을 할 때 북한 인민들은 진정한 광복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면 북한의 진정한 제2의 광복은 요원하다.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소명과 권력을 왜 마다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대전의 전리품으로 얻은 광복시대를 맞이해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서 거꾸로 가는 이 나라의 절반을 구하는 일에 피동적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한 인권침해의 가장 큰 이슈는 세계의 진화와 격리된 채 북한 주민 모두가 무지의 세계에 포박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무지는 자비로운 신이 하층민의 비참함을 덜어주기 내려주신 은총의 아편”이라고 했었지만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무지의 고통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

이제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의 초점을 상승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흔히 북한 인권하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을 집중 거론하지만 북한 지역 모두가 수용소이고 감옥이었는데 누가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남북한의 문명차이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고 우리는 통일시대에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 북한 인권개선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북한 주민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화 예술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형상한 요덕스토리가 오는 가을 미국 공연을 앞두고 있지만 정성산 감독은 걱정이 많다. 예산 때문이다. 인권법이 통과되면 그런 단체에 우선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전 세계에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일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갈 데까지 간 북한체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앞서간 우리 문명이 어두운 북한 땅을 두루 비치도록 문화콘텐츠들을 생산해져 암흑의 땅으로 공수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문화가치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의

가치들을 북한에 이식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도 하루 빨리 빛을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 가치, 이념, 성장비결은 향후 북한 체제에 고스란히 이식되어야 할 소중한 본보기이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는 한 자루의 총을 구하고자 많은 독립투사들이 흘렸던 피의 대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가 풍요의 환각 상태에 매몰돼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세계를 뒤흔드는 국력을 놔두고 저 북녘 땅의 신음소리가 계속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자못 엄중하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외치면서 파퓰리즘과 지역주의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정신으로 되돌아가 북한 땅,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애환을 달래줄 생각부터 앞세워야 할 것이다.

고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demned North Korea's neglect of human rights abuses. In addition, North Koreans deplore the fact that today's North Korean socialism is no better than the harsh rule in Korea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almost impossible for North Korea to promote human rights and develop a democratic system through its own efforts.

Thus the South Korean Assembly adopted the North Korean Bill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pressure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was followed by simila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enacted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spite urgent calls for the adoption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South Korean Assembly has not produced tangible results. The opposition party argues that its enactment might aggravate North Korea. The ruling party is engaging in a lot of smooth talk and shirking their responsibilities.

Thus, the question about what North Korea actually means must be raised at this point: it does not mean North Korean leaders who would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 North Korean Bill, but those of the majority of people having been suffered under their own government.

Crossing the river of human rights is an inevitable part of achieving inter-Korean unification,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an serve as a bridge to realize it. I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ratified, the allocated budget will enable many projects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Yoduck Story, a musical depicting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in a cultural and artistic way, is scheduled to be performed in the United States this fall, but director Jung Sung San (Jeong Seong-san, 정성산) is greatly worried about budget shortages. I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passed in the Assembly, it will add momentum to many projects educa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reality of North Korea.

---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before the Assembly must be passed immediately, as it can be a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 for implanting South Korean values in North Korea. South Korean laws, values, ideology and economic growth are important assets that North Korea must adopt. Many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shed their precious blood to fight the Japanese. It is not right for South Korea, which achieved splendid economic growth, to neglect the pain of the people in the North while it enjoys the pleasures of economic affluence.

Negligence will lead to heavier responsibilities if South Korea,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economies allows the suffering in the North to go on. Politicians pursuing populism and regionalism in the name of the national interest and the people's interest must reconsider the sacred spirit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ake measures to ease the pain and suffering the North Korean people are enduring. Thus, I once again strongly urge politicians to pas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mmediately.

## 북한 인권과 민주화의 진정한 사회적 변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은?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선배들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워야

*How Can We Create Genuine Social Change in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We Must Learn from Our Predecessors Who Strove for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이윤결 |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Yun-Keol Lee | President, NKSIS (North Korea Strategic Information Service Center)

사실 북한 인권과 민주화라는 역사적 사명과 의미는 우리 남북한에서 서로 다른 사상, 다른 체제, 제도, 그리고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로 하여금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수많은 함의를 나타낸다고 지금이야 생각된다. 특히 북한 현 기득권층을 반드시 배격하고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사실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심오한 사색을 부른다.

현재 6.25 남북 전쟁이후 비록 구호로나마 평화통일을 부르짖기 시작하여 장장 40여년의 역사를 거쳐 왔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정한 경제적 여유와 발전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남북한 통일을 우리의 의도대로, 정확히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북한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얼마나 많은 시행적 착오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잠간 우리의 남북 분단역사를 뒤돌아본다면 사실 남북은 서로 하나의 민족임을 초월하여 당시 북한은 러시아 볼셰비크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구현하려 했고, 남한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영향을 받아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유리하였다. 사실 두 쪽 다 당시로서는 서로 자기의 주관적인 노력이 아니라(물론 절대적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었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처한 환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서로 다른 이념

에 기초한 사회발전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주요인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하게는 당시 국제사회는 러시아(구 소련)와 미국이라는 두 대국의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인 1당독재의 동방이론 대 자유 민주주의 이론인 다원주의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서방이론이 대립되었고 이 두 양자 대결의 전초선이 바로 한반도의 3.8선이었다는 것은 현 한반도 남북 선각자들이라면 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결 속에서 남북은 사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망하기 전까지 냉전의 결전장에서 아주 쓸모 있는 대결도구였다.

남북한 잘잘못을 구태여 따진다면 물론 북한 현 체제를 이끌고 있는 ‘김씨가문’의 민족적 대죄와 그 추종무리들의 죄값을 적다고 볼 수 없지만 우선 남북 모든 주민들의 정치적인 각성이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분석된다. 물론 남한 주민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 기반 속에서 북한보다는 손쉽게 희생을 각오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오늘의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동유럽이 다 무너지고 공산주의 이념이 사실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먼 훗날에 있게 될 ‘천국’으로 만으로 우리의 ‘이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라는 평가를 받고 지구 밖으로 사라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의 유일독재-일당독재 식 ‘김씨독재체제’는 지금도 지구촌의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방식을 역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껏해야 3대도 갈라지지 않은 한 뿌리에서 태어난 두 제도 속 주민들의 생활수준차이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비록 북한이 자체로 ‘군사강국, 정치강국’이라고 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이제라도 당장 무너질 수도 있는 허약한 ‘경제약소국’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기껏해야 30년 전만해도 남북

경제상황은 거의 비슷했다는 주지의 사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강국’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현재 구체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통일을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주인의지가 박약하다. 무엇보다도 북한 현 정권이 300만 이상 기아와 굶주림에 주민들을 내몰면서도 키운 군사력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자기를 지킬 국방력도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못함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는 남북한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논하고 있다.

과연 가당할지는 북한에서 살았고, 그렇기에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쉽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매 개인이 지금 국가나 사회의 번영 속에 오늘 우리 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발전 이론의 역사적 발전의 객관성을 떠나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남북통일도 바라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을 민주화나 인권을 남의 집 울타리 문 지키는 개가 짖는 소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선진국’의 국민적인 정치적 감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듯하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20대미만의 청소년들의 70%이상이 통일이라는 필수불가결의 과제가 어차피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이 급사하고 불안정한 북한 사회는 급변하여 피할 수 없는 남북한 통일 기회가 피할 수 없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통일이라는 거대한 정치군사적 변화가 당장 목전에 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라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혹 그만큼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반증은 아



닐까? 또다시 지난 1940년대 남북 분단의 가장 큰 이유가 다시 재생되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런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비록 통일이라는 두 개체의 노력이 일방적임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남한의 통일 세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은 분명 아니다.

지난 우리의 역사는 비록 강력한 개입적인 구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 민주화 수준이 어린 측면이 남북한 분단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겠지만 지금 또 다시 남한 20대미만의 우리 청년세대(나는 통일세대라고 부르고 싶다)의 무관심 정치 수준이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 통일이 다가올 기회의 마당에서 장애로 애타단지로 둔갑할지가 걱정된다.

보다 걱정되는 주요인은 오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이 필요했는지

가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 해결도 그렇게 우리가 말처럼 쉽게 할 만한 '운동'이 아니다. 추정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북한에서 내려온 2만 3천명의 북한 이탈주민들(통일의 선구자들이라고 자처하지만) 모두 희생되더라도 쉽게 찾아 올 것 같지 않은 것이 바로 북한의 민주화 및 인권을 위한 사회적 변혁이다.

과연 오늘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을 위한 사회적 변혁이라는 거대한 과정에 과연 어떠한 댓가와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겨 볼 기회를 주게 되어 호소하고 싶다. 우리 탈북자들 모두가 진정으로 민주화가 무엇이며 그 실현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대한민국 의 민주화를 이루어온 남한의 선배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자라고 말하고 싶다.



In fact, the historical mission and meaning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has indescribable implications for those of us who have lived under different ideologies, political systems and cultures in North and South Korea. In particular, we must reject the current system of North Korea and achieve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goal which is not independent from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Thus, we must think about the true meaning.

Since the Korean War, South Korea has openly promoted peaceful unification for about 40 years. Even though South Korea enjoys its economic affluence and development, it still must suffer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to achieve Korean unification as hoped - via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based on free and democratic principles.

Where are we now? Even though South Korea is an economic superpower, it does not have the strong will for unification. Most of all, while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drives three hundred million people to hunger and starvation to build up military strength, we still fall short of the will to protect ourselves, maintaining a relatively weak national defense system. In spite of all these problems, we talk of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ased on the assumption of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ost alarming development is the way people are slowly forgetting the bloodshed and sacrifices made for South Korea's development. Solv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and democratizing the country will not be easy. Presumably, these goals cannot be achieved easily even if all 23,000 North Korean defectors, the so-called forerunners of unification, are sacrificed.

I would like to appeal everyone to take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how much sacrifice the social transformation for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quires of us toda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we North Korean defectors learn and learn again the relentless efforts and sacrifices made by South Koreans who strove for democratization.

##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 ◆ 고문단 (Advisory Group) ◆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Tae-Woo Kim  
(President, KINU)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Benjamin H. Yoon  
(Chairman,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Suk-Woo Kim  
(President, National Development  
Insititute)

### ◆ 협의회 운영위원 (Council Executive Committee) ◆

기관명 Institution	운영위원 Executive committee	홈페이지 Homepage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손기웅 (운영회장) Gi-Woong So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윤청용 (사무국장) Chung-Yong Yoon (Secretary General)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독교사회책임 Christian NGO	김규호 Kyu-Ho Kim	<a href="http://www.kcsr.kr">http://www.kcsr.kr</a>
NK지식인연대 North Korea Intellectuals Solidarity	김홍광 Hung-Kwang Kim	<a href="http://www.nkis.kr">http://www.nkis.kr</a>
두리하나 Durihana	김윤태 Youn-Tae Kim	<a href="http://durihana.com">http://durihana.com</a>
북한개혁방송 FNK: Free North Korea Radio	김승철 Seung-Chul Kim	<a href="http://nkreform.com">http://nkreform.com</a>
북한민주화위원회 Committee for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서재평 (감사) Jae-Pyoung Seo (Auditor)	<a href="http://www.cdnk.co.kr">http://www.cdnk.co.kr</a>
북한인권단체연합회 North Korea Human Rights Organization Association	정베드로 Peter Jung	
북한인권시민연합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김영자 Young-Ja Kim	<a href="http://www.nkplf.com">http://www.nkplf.com</a>
북한인민해방전선 NK people's Liberation Front	최정훈 Jeong-Hun Choi	<a href="http://www.nkplf.com">http://www.nkplf.com</a>
북한전략센터 North Korea Strategy Center	강철환 Chul-Hwan Kang	<a href="http://www.nksc.co.kr">http://www.nksc.co.kr</a>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North Korea Strategic Information Service Center (NKSIS)	이운걸 Yun-Keol Lee	<a href="http://www.nksis.com">http://www.nksis.com</a>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Institute of Traditional North Korea Food	이애란 Ae-Ran Lee	<a href="http://www.nkfood.or.kr">http://www.nkfood.or.kr</a>
북한정의연대 Justice For North Korea	정베드로 Peter Jung	<a href="http://www.justice4nk.org">http://www.justice4nk.org</a>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김영일 Young-Il Kim	<a href="http://www.pscore.org">http://www.pscore.org</a>
세계북한연구센터 World North Korea Research Center	안찬일 Chan-Il An	
송의동지회 Soon Eui Dong Ji hoe Inc.	한일성 Il-Seong Hahn	<a href="http://www.sungy.co.kr">http://www.sungy.co.kr</a>
자유북한방송 Free North Korea Radio (FNK)	김인실 In-Sil Kim	<a href="http://www.fnkradio.com">http://www.fnkradio.com</a>
자유조선방송 Radio Free Chosun (RFC)	이광백 Kwang-Paeg Lee	<a href="http://rfchosun.org">http://rfchosun.org</a>
탈북난민인권연합 NK Refugees Human Right Association of Korea	김용화 Yong-Hwa Kim	<a href="http://www.qnrgksdlsrnjs.co.kr">http://www.qnrgksdlsrnjs.co.kr</a>
탈북여성연대 The Coalition for North Korean Women's Rights	강수진 Su-Jin Kang	<a href="http://nkwomen.org">http://nkwomen.org</a>
탈북예술인단체총연합회 Federation of Muslim Artists Group Total	주명신 Myeong-Sin Ju	<a href="http://www.nkculture.or.kr">http://www.nkculture.or.kr</a>

●●●● 협의회 소식 (Council News)

창립총회(Inaugural Meeting)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2012년 3월 22일 결성하였다.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rganized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n March 22, 2012 in order to play a central role in consolidating domestic and foreign competence in regard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he Council is comprised of 21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are committed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년 북한인권백서 발간  
(Publication of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2012년 5월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였다. 「북한인권백서」는 시민·정치적, 경제·사회적 분야별로 북한주민, 탈북자 및 국군포로·납북자의 인권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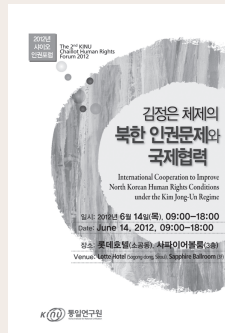
In May 2012,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s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Center published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The publication introduces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POW) and civilian abductees in civil,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ategories.



2012년 샤이오 인권포럼  
(KINU Chaillot Human Rights Forum 20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2차 샤이오 인권포럼"을 2012년 6월 14일 롯데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샤이오'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을 의미한다.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ill be holding 「KINU Chaillot Human Rights Forum 2012」 with the them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at Lotte Hotel Seoul on June 14, 2012. The term Chaillot comes from the Palace of Chaillot (Palais de Chaillot) in Paris, France whe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ember 10, 1948) was adopted.



2012년  
샤이오  
인권포럼

The 2<sup>nd</sup> KINU  
Chaillot Human Rights  
Forum 2012

#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09:00-18:00

Date: June 14, 2012, 09:00-18:00

장소: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볼룸(3층)

Venue: Lotte Hotel (Sogong-dong, Seoul), Sapphire Ballroom (3F)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샤이오’는 ‘세계인권선언’ (1948.12.10)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 (Palais de Chaillot)을 의미한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짐돌이 되기 위해 「샤이오 인권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The term ‘Chaillot’ comes from the Palace of Chaillot (Palais de Chaillot) in Paris, France whe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ember 10, 1948) was adopted.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periodically hosts the *Chaillot Human Rights Forum* in order to become the cornerstone for improv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KINU is also running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consolidate competence of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are committed to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 북한인권정책협의회(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신문로빌딩 3층)

Tel: 725-9506 (901-2623 통일연구원), Fax: 725-9507

(3F, Sinmunro Bldg.) 238 Sinmunro-1 Ga, Jongro-Gu, Seoul 110-061, Korea

Tel: 82-2-725-9506 (82-2-901-2623 KINU), Fax: 82-2-725-9507